

# 與 “지소미아 파기” vs 野 “정책 대전환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대응책 놓고 신경전  
민주당 “초당적 단합 필요”  
한국당 “외교 무능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제외와 관련한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강조점을 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목소리도 높여갔다. 반면 제1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 사태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이해찬 대

표), “지소미아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이인영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부동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

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이가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 한국당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경제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의 민주당과 한국당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도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 특히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방위 ‘北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국방위는 또 “북한이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

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국방위는 두 결의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연합뉴스

## ‘결별 위기’ 바른미래

손학규 “유승민 한국당 혼자 가라”... 유 “사과하라” 충돌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별 수순으로 치닫하고 있다. 당권파 수장인 손 대표와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수장 격인 유승민 의원이 이날 장외에서 정면충돌할 것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려면 혼자 가시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전날에는 손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 의원이 손학규 퇴진 안전장치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유 의원은 손 대표 발언 2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가 허위 사실로 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

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역공했다.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과 다른, 옳지도 않은 내용으로 왜곡하면서 한국당과 연대 통합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공생한 처지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라고 가세했다. 한편 비당권파 성향인 혁신위원회는 당권파 측의 경고에도 이날 오후부터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3일간의 ‘지도부 검증’을 강행하기로 했다. 청문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검증에서는 ▲바른미래당 성패에 대한 평가 ▲5% 지지를 상황에서 당 자강·해체 여부 ▲최고위원으로서의 자기 평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연합뉴스

## “日 경제 공격 종합 대응책 준비”

홍남기 부총리 합동 브리핑... 대책 마련 ‘속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제외를 결정하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자 청와대와 정부 역시 대기업 소통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일본의 규제조치로 받을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책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과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은 시장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로 국내 산업계가 급작스럽게 위기가 닥친다거나 ‘패닉’에 빠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권리당원 90만명 돌파

지난달까지 광주 5만5000명·전남 6만여명 입당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크게 늘어 7월 말 기준 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도 각각 5만5000여명, 6만여명이 입당 원서를 냈다. 당 조직국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이같이 보고했다. 소병훈 조직부총장은 이날 최고위 후 “7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65만명이 고 이번엔 입당하면서 아직 당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25만명을 웃돌아 모두 입력 처리되면 90만명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총선 공천을 찬반 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56만315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권리당원

이 60%가량 급증한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확정했다.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당내 경선 표를 확보하기 위해 8월 1일 전 신규당원 모집에 집중했다. 경선에 참여하려면 6만 이상 당비를 내야 하므로 최종 경선 선거권자 수는 90만 명보다 적어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선거권자는 80만~90만명 정도로 예측된다”며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선 당시 75만명보다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평화당 진로 놓고 ‘끝장 토론’

3지대 창당 갈등 봉합 관심

민주평화당이 5일 ‘끝장토론’을 통해 제3지대 정당 창당을 둘러싼 갈등 봉합을 시도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현격한 입장 차로 점점 마련은 불투명해 보인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창당을 논의한다. 당권파는 당내 기구를 통해 제3지대를 모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퇴진과 즉각 창당 착수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권노갑·정대철 고문은 이날 ‘신당 추

진’을 당원으로 정하고 양측이 1명씩 추천한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신당 추진 기구 구성 및 비당권파 당무 복귀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권파는 논외해보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비당권파는 ‘정 대표를 비롯한 현재의 지도부 퇴진 없이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제3진영과의 통합·연대가 절실하다”며 “당내에 설치할 ‘근대화추진위원회’를 전진기지로 총선 승리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 다스코진 세라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싶은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해주시거나 설비투자금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EPC 운영 유경험자
  -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분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질관리	실제영업	· 산업영업 경력자	나 주
	세라믹 (첨단소재)	영업	· 실제영업 경력자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처: 담당자 05190-2937, nco@daesco.kr, 접수시간: ~ 채용시까지

## 임야

삽니다. 010-6834-7400

지분불건 환영, 신속처리